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헤드라인뉴스 ‘벌금 누진제’ 등 엄격한 보건·방역지침 시행

사회·복지 대부분 지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재시행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확보 등
의료체제 정비

사회·복지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 강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음식점 내 취식과
신년 불꽃놀이 금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하노버 이희재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강기향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상파울루 김현아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희
바르셀로나 진광선
 박정수
싱가포르 이은주
런던 정기성
비엔나 안병선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시드니 정용문

‘벌금 누진제’ 등 엄격한 보건·방역지침 시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코로나19’ 확산 및 중앙정부 보건 대응역량의 한계에 따라 현행 ‘과도기적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의 보건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대규모 집회현장을 감독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

코로나19 추이

- 인도네시아는 12월 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약 550,000명, 누적 사망자 약 17,0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약 5,50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지속 확산
 -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최다 국가
 - 국지적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제약’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이동제한을 완화하자마자 코로나19 재차 확산
 - 또한 12월 9일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면 선거홍보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5일~15일에만 무려 398건의 보건지침 위반을 적발
- 자카르타주는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12월 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약 140,000명, 누적 사망자 약 2,700명, 일일 신규 확진자 약 1,100명을 기록
 - 특히 11월 둘째 주에 열린 이슬람 종교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행사에 1만 명이 넘는 군중이 밀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하면서 확산 급증
 - 이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통해서 아흐마드 리자 파트리아 부지사가 11월 29일,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가 12월 1일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행정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점유율이 급증하고, 계속된 의료진 사망자의 증가로 정부의 보건 대응역량에 한계를 노정
 - 자카르타주 98개 병원의 병상 점유율은 21%에서 75%로 폭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인 서부자바주 반둥시 27개 병원의 병상 점유율도 88.6%로 2개월 전의 32.5%에서 폭증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주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시로 이루어진 플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 11월 11일 현재 282명의 의료진(의사 159명, 치과의사 9명, 간호사 114명)이 코로나19 대응 중 사망
 -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신규 의사를 더욱 빠르게 양성하는 제도를 준비하고자 교육문화부, 보건부, 대학병원협회와 협의 중
- 술라웨시 섬의 한 병원에서는 격리병상이 부족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여건으로 의료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일도 발생
 -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TF팀과 협의하여 의료진의 보호 장비와 무료 진단검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계획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진의 3T 및 개인의 3M 지침 준수를 코로나19 방역대책의 기본으로 추진
 - 3T는 의료진의 추적(tracing), 검사(testing), 처치(treatment)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임
 - 현재 의료진의 진단검사 역량은 24,000~34,000명/일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주당 267,000명)에 미치지 못함
 - 3M은 현지어로 시민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menggunakan masker), 손 씻기(mencuci tangan), 사회적 거리두기(menjaga jarak)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임
 - 의료진의 3T와 시민의 3M 지침 준수가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3M 미준수 비율이 높음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인 Nielsen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만이 3M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9.3%는 전혀 따르지 않음
 - 게다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권력층에 의한 음모라고 믿고 있음
-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대규모 백신 긴급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3억 도즈(1도즈=1회 접종량) 확보
 - 식약청은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긴급접종을 보류했으나, 의료진과 군경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
- 자카르타 州정부는 약한 단계의 국지적 봉쇄조치인 '과도기적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를 12월 초까지 2주간 연장 시행 결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급증하지 않으면 2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급증 시 언제든지

지 '긴급 브레이크'로 단계 상향 조정

- 시민들의 3M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공채널을 통해서 홍보
 - 다만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55% 이상이 대규모 사회제약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악화를 호소하며 대규모 사회제약 조치 중단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
- 대규모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진료시설을 방문해 검사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행하도록 조치
 - 대규모 집회, 야외 결혼식 등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보건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을 행사 주최자에게 촉구
 - 자녀 결혼식에서 하객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5,000만 루피아(약 3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방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집회 감독 실패를 이유로 자카르타 경찰청장을 경질하고, 더욱 강력한 보건지침 준수 감독을 주문
- 자카르타 州정부는 11월 12일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관한 행정령을 통과시키고 1개월간의 과도기 후 본격 시행 예정
 - 해당 행정령은 코로나19 조치에 관한 지원, 책임, 권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
 - 가령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25만 루피아(약 2만 원) 또는 공공시설 1시간 청소 등의 공익의무 부과
 - 2차, 3차, 4차 위반 시 처벌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벌금 누진제' 도입
 - 특히,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보건당국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최대 500만 루피아(약 39만 원)에서 최대 700만 루피아(약 55만 원)로 상향 조정
 - 州정부가 10월 말까지 적발한 코로나19 지침 위반 건수는 21,000건 이상으로 누적 벌금은 총 51억 루피아(약 4억 원) 이상

정책 평가

-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州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보건대응과 종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간의 충돌에서 비롯
 - 보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금 부과 등의 소극적인 행정적 제재만 가능
 - 코로나19를 단순한 음모로 치부하는 등 일부 시민의 낮은 보건의식에 따른 보건지침 미준수가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23/indonesia-surpasses-half-a-million-coronavirus-cases.html>
<https://jakartaglobe.id/news/indonesia-passes-500000-coronavirus-cases>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25/covid-19-claims-life-of-indonesian-medical-association-official.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15/govt-urged-to-initiate-campaign-promoting-3t-protocols-amid-virus-concerns.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05/only-31-percent-of-people-in-six-big-indonesian-cities-follow-3m-health-protocols-survey.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18/no-emergency-vaccine-approval-this-year-says-bpom.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1/23/jakarta-extends-transitional-psbb-amid-rising-covid-19-cases-health-protocol-violations.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0/10/19/most-residents-want-restrictions-to-be-lifted-survey.html>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0/11/19/17234811/sudah-diteken-anies-perda-penanggulangan-covid-19-resmi-berlaku>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8/22/covid-19-jakarta-to-impose-progressive-fines-for-not-wearing-masks-in-public.html>
<https://www.jawapos.com/jabodetabek/23/11/2020/warga-dki-jakarta-yang-nolak-tes-swab-bisa-didenda-rp-7-juta/>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0/11/20/18160131/wagub-dki-denda-pelanggar-psbb-dki-jakarta-capai-rp-51-miliar>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대부분 지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재시행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는 10월부터 3차 유행을 겪게 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약 4개월 만에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을 재시행. ‘회복 이동제한령’에서 1단계 격상했지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1차 확산 때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이동제한 및 영업중단 등 봉쇄조치를 시행

코로나19 추이

- 1~2차 대유행
 - 말레이시아는 3월 초 1차 정점에 이어 6월 2차 정점을 겪었으며,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
 - 3월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종교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동제한령’(MCO) 시행
 - 지난 6월 사바주 경찰서와 유치장 수감자 집단감염으로 2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2차 정점 이후 9월 초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명 안팎으로 유지
- 3차 대유행
 - 9월 말에 열린 사바주 지역선거 이후 10월부터 3차 정점을 기록하며 10월 26일 신규 확진자는 1,240명으로 1천 명대를 기록
 - 11월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9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4,77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5명으로 집계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3월부터 ‘이동제한령’ 시행 후 6월에 ‘회복 이동제한령’으로 완화
 - 3월 중순부터 약 두 달간 시행한 이동제한령(MCO)은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모든 정부기관 및 개인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생필품 구매, 병원 검진 등을 제외하고 외출을 중단하는 봉쇄령
 - 1차 정점 이후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했으며, 5월 4일부터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6월 10일부터 상당 부분을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령’(RMCO) 실시

○ 10월부터 ‘조건부 이동제한령’으로 격상

- 하지만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으로 격상
 - 10월 13일부터 사바루, 14일부터 수도권인 클랑벨리(슬랑고르·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17일부터 라부안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선포
 -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프틀리스, 파항, 클란탄, 사라왁 4개 지역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실시
-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운영과 사회적 모임 등을 금지하고, 이동제한령과 달리 사업장 운영은 표준운영절차 준수를 전제로 허용
 - 10월 13일 발표된 ‘조건부 이동제한령 상세 표준운영절차’에 따르면, 생필품 구입 목적으로 외출 시 가족 구성원 중 2명까지 외출 가능,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인 1차의 이동 불가능
 -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 상업시설 영업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로 제한, 식당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종교시설 이용 인원을 6명으로 제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조건부 이동제한령’의 배경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배경

- 코로나19 3차 확산의 배경으로 선거 관련 방역 실패가 지목
 - 지역선거를 미루지 않은 이유는 지난 2월 제8대 총리로 지명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
- 이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레이시아 멈춰라(PauseMalaysia)’ 캠페인을 진행
- 또한, 선거유세에 나선 정치인이 마스크 미착용 등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바루 지역선거를 마치고 돌아온 유권자에 대한 자가격리, 역학조사 등 선거 관련 방역에 실패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일 1,000명을 돌파하는 3차 대유행을 겪게 됨

○ 봉쇄정책의 강도를 강화하지 않은 배경

-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3월 중순 때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봉쇄정책의 강도를 1차 정점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음
 -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는 봉쇄조치를 시행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해 199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5월 5.3% 기록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

-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봉쇄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조치를 차등화하고, 세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건부 이동제한령을 적용하게 되었음
-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강한 수준의 봉쇄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나 경제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방역 실패로 1~2차 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봉쇄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511194403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298001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2011282605027>

<https://www.therakyatpost.com/2020/10/13/klang-valley-cmco-heres-the-full-list-of-rules-from-the-national-security-council/>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확보 등 의료체제 정비

일본 오사카府 / 사회·복지

일본 오사카府는 지역행사 개최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외식업계 지원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치료 기준을 정비하고 중등증·중증 확진자용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

코로나19 추이

- 일본 오사카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자 9월 17일에 지역행사 개최 제한을 완화하고, 영세 음식점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실시
 - 10월 1일에는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Go To Travel’¹⁾과 외식업계를 지원하는 ‘Go To Eat’²⁾ 캠페인을 시작
- 그런데 10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고, 11월 1일 입국 제한을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
- 11월 19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누적 확진자 수는 16,374명이며, 이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9,524명
 - 최근 매일 4,000건 정도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 19일 기준 양성 진단 비율은 9.4%를 기록
 -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면, 11월 6일~12일 1,291명에서 11월 13일~19일 1,767명으로 약 1.4배 증가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1월 19일 현재 중증 입원 확진자가 76명, 경증·중등증 입원 확진자가 530명, 시설 치료자가 497명, 자택 치료자가 715명으로 늘어남

의료체제 정비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한 입원·요양 체제 정비
 - 도도부현지사는 감염증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을 권고할 수 있음

1) 여행비용 할인과 더불어 지역 공통 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

2) 코로나19로 힘든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Go To Eat’ 지정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점심 500엔(약 5천 원), 저녁 1,000엔(약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캠페인

- 입원 조치 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호흡기 환자, ③ 장기(臟器) 등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자, ④ 면역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자, ⑤ 임신부, ⑥ 중등증 또는 중증 코로나19 확진자, ⑦ 의사가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⑧ 도도부 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⑨ 감염 방지 규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은 자임
 - 다만 오사카府는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府의 지침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 자택치료 중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함
 - 오사카府는 11월 18일에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협의회’에서 府의 ‘입원’ 관련 지침에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때에는 보건소가 담당 의사와 협의해 가능한 경우 시설치료로 한다’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논의
- 중등증·중증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병상 확보 대책
- 중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
 - 의료기관이 확보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요구(야간·휴일 불문)
 - 중등증 확진자용 병상 보유 의료기관도 상황을 봐가면서 중증 확진자를 받도록 요청
 - 중증 환자 담당 의료기관의 확진자 관리 강화
 - 경증·중등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
 - 중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확보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요구
 - 중등증 확진자나 위험도가 높은 확진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청
 - 숙박시설 확보
 - 시설치료를 위한 숙박시설 추가 확보
 - 기타
 -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 장기입원 확진자의 병원 이동이나 퇴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연계 강화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cov_kyogikai_07.html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490878.html>

http://www.pref.osaka.lg.jp/attach/38215/00379293/1-1_shuuseigo_kansenzyoukyou.pdf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 강화

인도 델리 NCT¹⁾ / 사회·복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델리 NCT 정부는 감염 취약 장소에 대한 통제와 함께 개인 방역지침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강화.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수 확대 및 전용병상 추가 확보로 의료공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코로나19 추이

- 인도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중 10만 명에 근접했으나 11월 기준으로 5만 명 이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확산세는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 세계 2위 감염국을 유지
 - 11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진단검사 건수는 1억 3천만 건에 이르고, 하루 100만 건 이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면서 지속적 검진을 통한 감염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런데 델리 NCT 지역은 인도 전역의 진정세와는 달리 일일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고 누적 확진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서 감염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감염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된 분위기에서 11월 들어 대기오염 악화와 함께 명절기간 동안 유동인구 증가가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추정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인도 중앙정부는 5월부터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어왔음
 - 다만 지방마다 확진자 추세가 상이해 지방정부가 그에 맞추어 각기 다르게 대응
- 델리 NCT 정부도 최근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증가세를 완화하려고 노력 중
 -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시장(市場)의 봉쇄를 고려하는 동시에 결혼식 참석인원 상한선을 50명으로 축소하며 완화해왔던 부분에 대해 통제를 강화
 - 시장(市場)의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임시폐쇄를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고려 중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인들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

- 대부분의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며, 종교시설도 명절기간 동안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집에서 보도록 권장하여 밀집된 인원이 물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일부 존재
- 11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방역 기본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5백 루피(약 8천 원)에서 2천 루피(약 3만 원)로 인상하여 개인 방역활동 강조
 -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는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흡연행위 금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의료대책의 주요 내용

- 텔리 NCT 정부는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격리를 위해 선별진료소 수를 2배로 늘려서 기존의 하루 진단검사 건수인 6만 건보다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
- 이외에도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전용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에 있는 응급병상의 80%까지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확대 지정하여 기존 1천4백여 병상에서 약 4백 병상을 추가 확보
 -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하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존 침대기차를 활용하여 8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
- 장기적으로는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계획도 수립 중
 - 지역 내 항체보유율은 10월 기준 25% 수준이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49.5%를 기록하며 구역별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도 일부 존재
 - 백신 배포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텔리 NCT 정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노년층 등 질병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정책 평가

- 텔리 NCT 정부는 봉쇄의 단계별 해제 후 코로나19 감염 취약장소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방역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강화시켜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
 -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5천여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는 방역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
 - 텔리 NCT 정부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통해 확산세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초기의 엄격한 봉쇄령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발표

- 인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내년 2분기부터 성장을 반등을 기대하는 상황이며, 델리 NCT 정부도 경제활동을 억제하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방역활동을 강조하고, 의료인프라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자 함
 -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인도는 내년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경제회복세를 전망



[사진 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 2] 침대기차를 활용한 코로나19 병상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delhi-govt-after-diwali-likely-to-put-in-place-several-covid-19-preventive-measures/articleshow/79212836.cms>

<https://thewire.in/government/delhi-covid-19-markets-hotspot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all-hands-on-deck-delhi-govt-orders-doubling-of-test-centres/articleshow/79311421.cms>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herd-immunity-not-quite-at-25-5-seroprevalence-statistics/articleshow/79182898.cms>

<https://zeenews.india.com/india/as-covid-19-cases-rise-delhi-government-takes-this-big-decision-regarding-chhath-puja-2324323.html>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12029041>

<https://www.ndtv.com/delhi-news/coronavirus-delhi-records-118-covid-19-deaths-6-608-new-cases-take-count-to-5-17-lakh-2328158>

<https://www.ndtv.com/delhi-news/no-vip-or-non-vip-categories-for-covid-19-vaccine-arvind-kejriwal-2328206>

<https://www.theweek.in/news/india/2020/11/20/aap-covid-measures-delhi-fine-for-not-wearing-mask-raised-more-icu-beds-reserved.html>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음식점 내 취식과 신년 불꽃놀이 금지

네덜란드 / 사회·복지

네덜란드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하여 12월 중순까지 외식 사업장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부분적 봉쇄를 유지할 계획. 12월 1일부터는 밀폐된 실내 대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의료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새해 전야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판매 및 사용 금지.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3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코로나19 추이

- 11월 22일까지 네덜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9천 명, 누적 사망자 수는 8,870명으로 인구(1,728만 명) 대비 감염 비율이 매우 높은 편
 - 9월 중순을 지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네덜란드 질병관리본부(RIVM)는 9월 22일 2차 유행을 공식화
 - 3월과 4월 1차 유행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 중순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을 지나면서 빠르게 확산
 - 10월 24일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11,079명)를 기록하였고, 11월 셋째 주 들어서 일일 평균 5천 명대로 다소 안정됨
 -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10월 넷째 주(19일~25일)에는 32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18.4%인 59,09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
 - 질병관리본부는 일일 검사역량을 9만 건 이상으로 확보하여 진단검사 및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
 - 12월부터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2021년 1분기에는 35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1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원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이 차순위 대상
 - 2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60세 이상 노년층이며, 기저질환 유무와 나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정해 접종
 - 3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노년층과 접촉하는 돌봄 노동자(간병인 등), 코로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의료계 종사자 등임

-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 방역대책

- 10월 14일 부분적 봉쇄(partial lockdown) 시행(최소 12월 중순까지 유지 예정)
 -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¹⁾에 따른 5단계 조치 중 4단계(매우 심각)에 해당하는 부분적 봉쇄 조치를 10월 14일부터 시행
 -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최대 3명이며, 실외에서는 최대 4명까지 동행 가능
 - 또한 실내 회의 및 모임(결혼식 등) 참석자는 최대 30명으로 제한하며,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최대 100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1.5m 거리 유지 의무만 준수하면 인원 제한 없음
 - 카페, 식당 등 모든 외식 사업장은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
 - 호텔(투숙객 대상), 병원 및 회사의 구내식당, 공항 면세구역 등은 예외
 - 저녁 8시 이후에는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옷가게, 생필품점 등) 영업 불가
 - 저녁 8시~오전 7시 주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불가
 - 18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경기 금지
 - 선수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운동선수, 프로축구 1부 리그와 2부 리그 선수는 제외되며,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림
 - 18세 미만의 경우 같은 팀 소속 선수 간 훈련 목적의 경기는 가능
 - 내년 1월 중순까지 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
- ‘코로나(CoronaMelder) 앱’ 배포
 - 코로나 앱을 통해 확진자와 1.5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 알림을 전송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 10월 10일 코로나 앱이 배포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4백만 건 이상
 - 앞서 10월 6일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해당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 GPS 등 위치정보가 아닌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선 추적 및 기록 저장은 불가²⁾
 - 12월 1일부터는 앱을 통해 접촉 및 감염 위험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자가격리

1)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뤄진 검사 결과를 중앙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일 통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봉쇄조치 시행. 1단계(50명 미만), 2단계(50~150명), 3단계(150~250명), 4단계(250명 이상)로 이뤄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단계를 발동하여 완전 봉쇄 조치를 취함

2) 네덜란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동선 추적을 통한 역학조사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는데, ‘코로나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인해 앱 배포가 지연됨

- 증상이 발현되는 평균 잠복기간인 5일 경과 후 검사를 실시하며, 자가격리는 음성 통보를 받는 즉시 종료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코로나 임시법(Temporary Covid-19 Act) 발효
 - 밀폐된 실내공간(상점, 식당, 미술관, 극장, 기차역,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95유로(약 12만 원)를 부과
 - 지금까지는 대중교통(기차, 트램, 버스, 지하철 등의 내부)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체크인,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항공기 탑승 시)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³⁾
 - 앞서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실내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⁴⁾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을 막는 등의 조치는 없었음
 - 지자체는 푸드뱅크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새해 전야 불꽃놀이 임시 금지 조치 시행
 - 네덜란드에서는 연말연시마다 폭죽으로 인한 화재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⁵⁾
 -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및 의료인력의 초과 근무 등에 더해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임시로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판매 및 사용 중단 조치 시행
 - 관련하여 폭죽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임시 보조금 4천만 유로(약 531억 원) 지원
- 의료분야 돌봄 노동자에게 보너스 일시 지급
 - 간호사, 간병인, 청소노동자, 기타 관련 돌봄 노동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보너스 1,000유로(세후, 약 132만 원)를 일시 지급
 - 내년에 추가적으로 500유로(세후, 약 66만 원)를 지급할 예정
 - 연소득이 의료업계 평균 연봉의 두 배인 73,000유로(세전, 약 9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음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이 단체로 신청
 - 소득 기준 및 직군 제한으로 인해 의사와 실습생 등은 제외
 - 이에 네덜란드봉직의협의회(LAD: National association of Employed doctors)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군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치라며 항의
 - 이에 정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간호사 등 돌봄 직군의 기본급여 자체가 낮아

3) 6월 1일부터 시행. 만 13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4) 네덜란드 헌법에 따라 일반 대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정부는 임시법을 마련하는 동안 '강력 권고'를 유지해왔음. 앞서 1차 유행 때는 마스크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5) 한 예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 1,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이번 보너스가 이들에게 더 절실하다고 양해를 구함⁶⁾

-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여도가 높은 종사자 80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22억 유로(약 2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
 -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별도의 기여도 평가 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너스를 신청
 -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추가적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줄 것을 당부

정책 평가

-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여름휴가철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 정부는 부분 봉쇄에 앞서 실내 최대 모임인원과 요식업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2단계(9월 20일), 3단계(9월 28일) 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
 - 부분 봉쇄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추가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음
 - 정부는 완전 봉쇄를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해 감염 확산세가 크게 줄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입원환자 수 증가로 인해 병원 과부하 등이 심각해지자 11월 4일부터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2주 동안 추가 폐쇄(11월 19일 해제)
- 전국요식업협회는 3월과 10월 두 차례 봉쇄 조치로 인해 업계 전체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적 지원과 봉쇄 조치 완화를 요구
 - 식당,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
 - 요식업을 비롯하여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연휴 이전에 조치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6) 특히 간호사 직군은 급여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에 의한 재정난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보너스 형태의 임시조치가 시급하다고 부연 설명함

<https://nos.nl/artikel/2357378-kabinet-vaccinatie-gratis-en-vrijwillig-60-plussers-en-kwetsbaren-eerst-aan-de-beurt.html>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nieuws/2020/11/17/gedeeltelijke-lockdown-gaat-verder>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nieuws/2020/10/02/dringend-advies-tot-dragen-van-mondkapjes>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vuurwerk/vuurwerkverbod-oud-en-nieuw-2020-2021>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zorg/zorgbonus>

<https://www.lad.nl/lad-maak-voor-zorgbonus-geen-onderscheid-op-beroep-of-inkomen/>

<https://www.khn.nl/nieuws/khn-in-gesprek-met-minister-president-rutte>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91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